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영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99
----------	------

발의연월일: 2024년 9월 일

발의자: 이영경, 박은미, 박주윤, 민영미,  
박종각, 안극수, 김종환, 최종성,  
성해련, 황금석, 조우현, 김보미,  
김선임, 강상태, 서희경, 김보석,  
정용한 (이상 17명)

## □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가 위협받고 있음.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

## □ 주요내용

-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매년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 건수의 증가, 청소년의 불법 이용, 무단 방치, 배터리 폭발 위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규가 강화되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교육청

○ 붙임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부.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 PM)는 전기동력을 이용해 저속으로 움직이는 1인 운송 수단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되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포함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복잡한 대중교통을 피해 짧은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작동 방법이 간단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의 급증에 따라 관련 사고의 증가, 이용자들의 무질서한 이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격을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보유자로 강화하고, 안전모 미착용 및 동승자 탑승 등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중 무면허 사고가 34.6%를 차지했으며, 이 중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20세 미만이 67.6%로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가 필수이지만, 면허 인증 의무 조항이나 벌칙 등이 부재한 탓에 대다수의 대여업체가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 없이 기기를 대여하고 있어, 청소년 무면허 이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다 60대 부부를 덮쳐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서울 도심에서 폭주를 예고했던 ‘따릉이 폭주족 연맹’ 운영자도 고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방해 및 보행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없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됨에도 지자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현재의 도로교통법과 일부 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에 대한 규제와 등록제 도입,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등이 담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와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92만 성남시민을 대표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교육부는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이용 근절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2024년 9월 일**

**성 남 시 의 회**